"행복"이 대물림되는 사회 만들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4대 정책방향·11대 정책과제

■ 일 시 : 2006년 5월 2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기자실

■ 기자회견 순서

1. 실태조사 배경
2. 경과보고
3. 실태조사 방법 및 한계
4. 사회양극화 요약 및 4대 정책방향
5. 행복이 대물림되는 사회 만들기 11대 정책과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1.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 속에 성장 일변도의 양적인 경제발전정책은 심각한 빈부격차를 불러일으켰으며, IMF이후 정부정책실패로 말미암아 실업과 비정규직이 급팽창하면서 우리사회의 사회적 양극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기의식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5.31 지방선거를 앞둔 요즈음 사회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급조된 정책들이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방법 등과 같이 임시방편으로 서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의료, 교육, 보육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등 신자유주의 국가정책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사회양극화 문제는 서민의 경제적 소득격차로 야기되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사회 불평등·사회배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자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우리지역 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분석·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번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를 위해 대전광역시청,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발표된 각종 통계자료와 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각종 문헌자료를 참조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5.31지방선거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4대정책방향 및 11대정책과제"를 각 후보자들에게도 제안한다.

2. 경과보고

○ 3월 9일 /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를 위한 기획

○ 3월 16일 /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를 위한 1차 기획회의

○ 3월 27일 /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를 위한 2차 기획회의
- 지역사회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샵 기획

○ 4월 17일 / 사회양극화 실태진단과 대안을 위한 워크샵 개최

○ 4월 18일 ~ 21일 / 정책개발을 위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 4월 26일 /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 빈곤·노동분야 발표

○ 4월 27일 /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 교육·의료분야 발표

○ 5월 2일 / 사회적양극화 해소를 위한 4대 정책방향 11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 5월 3일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4대정책방향 및 11대정책과제
- 지방선거 후보자 대상 제안

3.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방법

1) 기획 및 실태조사 기간 : 3월 9일 ~4월 16일

2) 실태조사방법 : 각종 통계자료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3) 실태조사 각종 참고 문헌

대전광역시	·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 2003년,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통계자료실 · 1998년 및 2001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빈곤 · 저소득층 · 보건 복지분야 연구자료 및 건강길라잡이 통계실 · 김혜련 외,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방향 · 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건설교통부	· 임대주택업무편람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회통계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
노동부	· 20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통계
대전광역시 교육청	· 학교급식비 및 미납 및 사설학원 실태 통계 · 대전지역 사교육 실태 및 공교육 발전방향 보고서
여성가족부	· 2004년도 전국 보육 · 교육 실태조사
직업능력개발원	· 2004년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 2005년 대전시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 200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이혜영	·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
이진석	·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2005년

※ 이 외 각종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실태조사 자료집에 참고문헌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음.

2. 실태조사의 효과와 한계

1) 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

○ 대전지역의 사회양극화 실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됨.

○ 대전지역의 구체적인 사회양극화 현상을 진단

○ 지역사회 의제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2) 실태조사의 한계

○ 문헌자료 참고로 인한 조사연도의 불일치

○ 통계자료 부재 및 실태조사가 직접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한 정확성 부족

3) 양극화 실태조사를 통한 제안

○ 지역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추가적인 범지역사회 차원의 실태조사 필요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대전광역시 통계DB 업그레이드 필요(2003년도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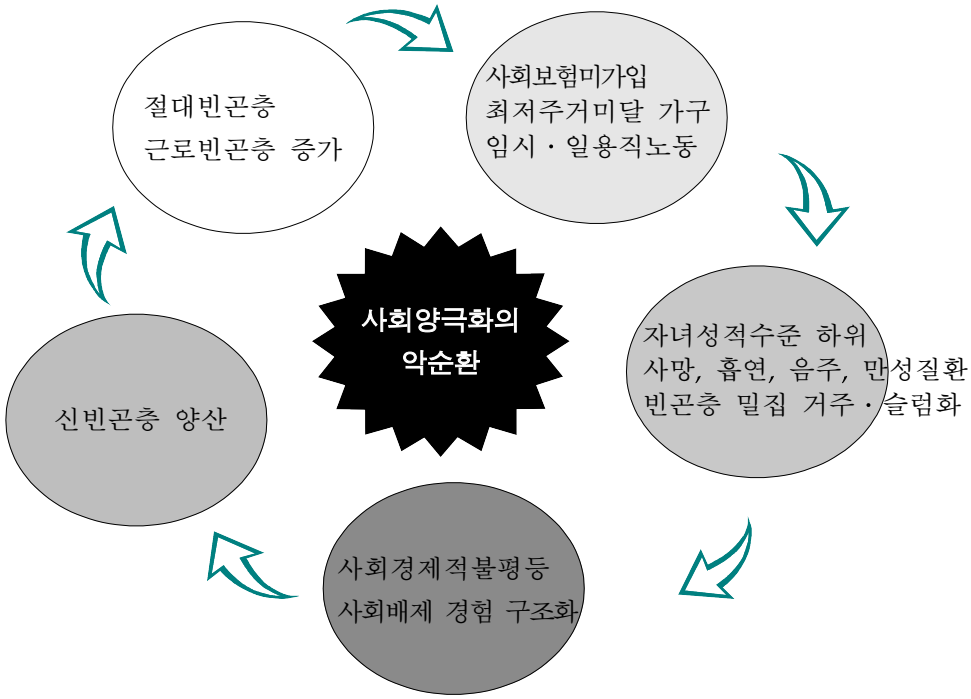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 교육청 통계자료 업그레이드 및 통계항목의 범위 확장

○ 노동계 관련 근로자 실태에 대한 지역별·종사상지위별 조사 필요

-예) 대전시 사회보험 미가입현황

4. 사회양극화 요약 및 4대 정책방향

1.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예산 대폭 확대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

3) 계층간·지역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4) 접근성이 담보되는 거주지 중심의 복지 실현

2. 4대 정책방향

1)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예산의 대폭 확대

빈곤율의 증가와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할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각 부문별 예산을 최소한 일반회계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20%, 보건의료 예산은 5%를 확보하여 근본적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도입 추진토록 한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

가난할수록 사망, 질병으로의 위험에 놓여있으며 가구소득이 자녀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사회구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박탈 및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확대하도록 한다.

3) 계층간・지역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교육, 주거, 노동 등의 동서격차로 대표되는 계층간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 등의 지원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접근성이 담보되는 거주지 중심의 복지 실현

장애인, 노인, 빈곤층일수록 의료의 이용, 문화・정보접근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거시적 복지정책에서 이제는 생활단위의 복지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복지정책 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5. 행복이 대물림되는 사회 만들기 11대 정책과제

1. 사회복지예산 20%, 보건의료예산 5% 확보

▌정책요구

○ 현재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예산(복지정책과, 양성평등과, 노인장애인과) 16.9% 보건의료예산(보건위생과) 1.7% ○ 사회복지예산 20%, 보건의료예산 5%확보

▌현황 및 근거

○ 우리나라의 2001년 사회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은 8.70% 수준으로 스웨덴(GDP의 31.47%), 덴마크(30.1%)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함.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공적인프라구축을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적인프라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예산의 확보는 필수적임.

○ 보건복지여성국 총 예산 264,088,764천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8.9%임.
- 이 중 여성회관을 제외한 예산이 18.6%
- 사회복지예산을 복지정책과, 양성평등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보건의료예산을 보건위생과로 분류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예산은 16.9%, 보건의료예산은 1.7%임.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예산 내에 낭비성 예산을 제외한다면 사회복지·보건의료에 투여되는 예산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복지분야 예산 20% 확보, 보건의료분야 5% 확보 시 예산액수 추계
- 2006년 일반회계 예산 1,391,013,000천원
- 사회복지예산 16.9%, 235,937,165천원 ⇒ 20%, 278,202,600천원 / 42,265,435천원
- 보건의료예산 1.7%, 24,738,066천원 ⇒ 5%, 69,550,650천원 / 44,812,584천원

※ 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2.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정책요구

1. 사회양극화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사회복지위원회를 종합적 복지정책 연구, 심의조정·통합기능의 거버넌스형 사회복지정책협의회로의 개편 3. 동구지역 맞춤형 복지도시 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사무소 우선 시행

▌현황 및 근거

1) 사회양극화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태조사 미비

- 전반적인 양극화 실태보다 기관현황이나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에 불과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태파악 시스템 구축

- 현 자료의 업그레이드 시급과 항목의 범위 확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현황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의 연도별 자료축적
- 동사무소와 구청, 시청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

2) 거버넌스형 사회복지정책협의회로의 개편

○ 사회복지위원회의 복지정책협의 및 계획수립 기능 미비

- 형식적인 연2회 개최되는 회의로 대전시의 사회복지정책을 논의하고 수립하기에 무리임.

○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정책협의회로의 개편과 기능확장

-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연구, 심의조정·통합기능
- 사회양극화 실태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마련
- 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적 복지정책 수립

3) 동구지역 맞춤형 복지도시화 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사무소 우선 시행

○ 빈곤층의 동부지역 밀집거주

- 5개 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음. 전국시군구 중 서구51위, 유성구 39위, 중구 92위, 대덕구 109위, 동구 126위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등이 타 구에 비해 높음.

○ 대전광역시 차원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사무소 우선 시행을 통한 동부지역 복지수요 충족

3. 국·공립보육시설의 현 이용아동 수 대비 50% 이용여건 확충

▌정책요구

○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의 50%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 국·공립보육시설 134개소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 - 기존의 건물활용을 통한 신축비 절감

▌현황 및 근거

○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

- 여성의 사회진출 및 가족구조의 변화, 출산율저하에 따른 사회적 요구확대
-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계층간 투자격차 심화에 따른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기본적 전달체계 필요함.

○ 민간보육시설 위주의 보육정책

- 현재 대전지역은 전체 보육시설 977개소 가운데 가정보육시설이 53.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민간보육시설이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은 2.8%에 불과함.(2005년 12월 말 기준)

○ 보육시설이용률 저하

-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하는 0~6세 전체 아동 대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42.9%임.(2005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 여성가족부 보육시설통계,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현황 통계 재가공함)
- 시설이 전체 아동 대비 50%를 차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충족률이 75%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모들이 보육시설 이용보다 다른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임.
- 특히나 국공립보육시설은 91%의 정원충족률을 보이는 반면, 민간개인시설 74%, 가정보육시설 68%로 국공립시설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이 낮음.

○ 보육시설의 신뢰도 및 질 향상을 통한 이용률 제고 필요

-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기본적 전달체계 필요.
- 공공서비스를 통한 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통제
-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음.

○ 134개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현재 민간·개인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21,530 × 50% = 10,765명
- 확충되어야 할 보육시설 수 : 134개소 확충

10,765명 ÷ 80명 = 134개소

4. 장애인재활센터 5개소 설립

▌정책요구

○ 장애인재활시설 각 구별 5개소 신설

▌현황 및 근거

○ 2005년 9월 기준, 대전시 주민등록인구수는 1,462,137명이며, 이 중 등록장애인 수는 49,317명으로 3.3% 차지함.

<표 1> 대전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소계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장애인단기 보호시설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심 부름센터	수화통 역센터
시설현황	29	4	1	10	-	10	1	1	2
종사자현황	202	115	12	33	-	19	2	12	9

·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

○ 일반병원(공공병원, 민간병원)에서 재활, 정신보건, 희귀성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 하는 실정임.(강은정,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의료와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2004년) 또한 만성질환 및 장애를 가진 집단은 장기간의 의료이용으로 경제적으로 고갈될 확률이 매우 높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 함으로 인해 질병의 악화가 가속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 초래하게 됨.

○ 특히나 장애인에게 있어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요구됨. 그러나 대전지역의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은 고작 1개소에 종사자는 12명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시설의 확충과 함께 재활시설의 종사자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자 한 명당 244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게 되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종사자 한 명당 4천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재활시설은 특정 신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비장애인 또한 예방적차원의 재활치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료비를 줄일 수 있음.

5. 공공노인요양시설 5개소 및 노인인구 수 대비 5% 이용시설 확충

▌정책요구

○ 노인요양장기보호에 따른 비용절감, 수발자의 수발부담 저하, 양질의 보호제공을 위한 공적 인프라를 확충
○ 노인요양시설 5개소 확충 및 장기적 노인인구 수 대비 장기적 5% 확충

▌현황 및 근거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대전지역 65세 이상 노인이 7만 5천명, 전체 인구 대비 5.4%.
○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50.9%는 가족 수발을 받고 있으며, 23.1%는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어 총 수발률은 74%임.
○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노인의 수발을 1차적으로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함. 그러나 노인수발이 장기화되고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부모의 노환에 의한 와상상태 시 수발에 대해서 자녀가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62.5%, 자녀가 힘이 미치지 않을 때 국가·사회가 보살핀다로 21.1%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2001년)
○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인수발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전국 평균 노인인구 대비 시설 충족율은 0.9%이며 대전의 경우 1.6%임.

<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시·도	노인인구 대비 시설 충족율 (B/A)	65세 이상 노인인구(A)*	합 계			무 료 시 설			실 비 시 설			유 료 시 설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정원	현원(B)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0.9%	**4,324,780**	**865**	**48,461**	**37,722**	**425**	**26,808**	**22,639**	**192**	**6,465**	**4,728**	**248**	**15,188**	**10,355**
대전	1.6%	99,811	33	1,986	1,628	15	869	832	5	189	139	13	928	657

· 보건복지부,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재구성./ (*)표시는 2005.12.31 주민등록인구기준임.

○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위해 요양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2002~2011)을 수립 시행하고 금년에는 349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신축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국고 대 지방비 부담률이 50:50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을 기피하고 있음.
○ 대전은 5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신청하고 있지 않음.

○ 노인인구 3.4%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 필요
- 3,3893명 ÷ 60명 = 56개소
○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이 국고보조비율 국고:지방비가 50:50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전국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함.

6.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저소득층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요구

○ 도시보건지소 5만명 당 1개소씩 설치
○ 인구 수가 서구가 가장 많으나 취약계층이 동구와 중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비율 조정
○ 공공의료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현황 및 근거

○ 대전시 1개 동에 취약계층 인구 수가 2,094명으로 동 평균 인구 수의 11.6%이며 총 79개 동 전체 취약계층 인구는 165,42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도시와 농어촌형의 지역 보건소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는 보건소 1개소당 관리 가구 수가 2만여명인데 반해 도의 보건소는 588명으로 4배의 차이가 남. 오히려 도시형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가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2003, 양봉민 외)에 의하면 현행 도시 보건분소 1개소 운영으로 인해 총 7억 9천만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의 보건지소에 대한 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10억원의 보건의료비용 절감이 예상됨.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정기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민의 경우 상당한 편익이 예상됨.(양봉민 외,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03)
○ 계량 가능한 경제적 편익 이외에도 저소득층에게 주는 심리적 안도감,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신뢰도 상승, 소득재분배 효과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사회적 편익 비용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도시보건지소 5만 명당 1개소씩 설치
- 2006년 2월 말 기준 인구 수 1,462,535명 ⇒ 29개소 설치 필요
-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2003년)에서 인구 5만명 당 1개소 제안
- 인구 수 기준만으로 했을 경우 동구 4.7개소 / 중구 5개소 / 서구 10개소 / 유성구 4개소 / 대덕구 4개소

7. 각 동별 「작은 마을어린이도서관」 건립

▌정책요구

○ 아동의 생활권역 범위에 있는 마을어린이도서관 건립
- 1개 동 1개 마을도서관

○ 폐쇄위기에 놓여있는 동사무소 문고의 재편
- 귀퉁이 문고에서 마을사랑방 문고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에서 주민공동체로 운영되는 문고로 전환

▌현황 및 근거

○ 2004년 말 기준, 대전시 도서관 1개소당 인구 수는 96,231명, 1석당 151명, 1인당 책 수는 0.98개로 대전 시민 1명당 1개의 책을 향유할 수 없음.

<표 3> 공공도서관 현황

구분	인구(명)	공공도서관					시설규모(㎡,석)		자료	
		계	시·도	시·도 교육청	사립	1관당 인구	열람석	1석당 인구	도서자료	1인당 책 수
전체	48,583,805	487	250	223	14	99,761	247,792	196	38,423,789	0.79
대전	1,443,471	15	13	2	0	96,231	9,529	151	1,408,775	0.98

·문화관광부, 2004년 말, 공공도서관 현황

○ 2004년을 기준으로 각 구청에 신고 된 문고 73개소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내 10개소로 총 83개소가 있었으나, 이 중 폐업상태인 문고가 27개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문고는 56개소에 불가함.(「마을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대전지역 공·사립문고 실태조사」, 2004년)

○ 천안시의 경우, 중앙도서관과 성거도서관의 이용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주택가에 만들어져 있는 쌍용도서관의 이용자 현황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앙도서관은 열람식 위주의 자율학습장소로 이용되지만 쌍용도서관의 경우 주택가에 형성되어 있어 시민이용율 증가로 대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천안신문, 2004.06.01일자)

○ 우리나라 도서관은 크게 지어 도심의 외곽 지역에 설치하며 열람위주의 운영방식으로 인해 어린이 및 주부들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넓이는 약 106㎢이고 총20구로 나뉘어져 있음. 이 지역의 도서관은 총 62개소이며 이 중 어린이 단독 도서관은 14개소로 걸어서 5~10분안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음.

8.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정책 도입

▌정책요구

1. 저상버스의 점진적인 확대
   ○ 시내버스 자연감소분 매년 80~100대 예상 ⇒ 저상버스로 전환
   ○ 저상버스 100대 구매 시 지원금 120억 예상
   ○ 현재 저상버스 노선을 좌석버스 노선에서 일반버스 노선으로 전환
2. 점자블럭의 설치확대와 정비, 보도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보행환경의 획기적 개선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

▌현황 및 근거

○ 교통약자
-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일반인에 비해 약자인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약자인 고령자·부녀자·어린이 등이 속함.
- The Transportation Poor : 신체적,제도적, 혹은 사회적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 즉 고령자, 신체장애인, 유아, 저소득자, 소외지역 주민 등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교통개발연구원, 2004)

○ 교통약자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 대비 25.6%로 보고 있음(교통개발 연구원)
○ 장애인과 노인이 보도를 이용하여 외출할 때 보도의 장애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장애인은 54.3%, 노인의 31.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개발연구원, 2004)
○ 장애인·노인의 차량 교통수단이 장애인(23.1%)과 노인(56.8%) 모두 버스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42.4%임. 시내버스가 이들에게 주요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70%, 노인 60% 이상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한국개발연구원, 2004, 장애인과 노인의 교통실태 조사)
○ 대전시는 저상버스를 2010년까지 100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26대 운행 중임.
※ 현재 대전시내 시내버스 902대 가운데 폐차 등의 이유로 매년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대수가 80~100여대로 추정하고 있음. 이를 저상버스로 전면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재 기 도입된 26대의 저상버스 조차 전국에서 유일하게 좌석버스 노선에 투입되고 있으나 저상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해야 할 것임.

○ 장애인과 노인이 보도를 이용하여 외출할 때 보도의 장애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장애인은 54.3%, 노인의 31.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개발연구원, 장애인과 노인의 교통실태 조사, 2004년)
○ 교통체계가 약자를 대상으로 구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지와 교통시스템을 이용하기까지의 거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장애인의 사회접근성을 높일 수 없음.
○ 저상버스의 교통체계 구축과 더불어 보행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함.

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조례 제정

▌정책요구

1. 대전광역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 민·관 협의 기구인 교육복지정책위원회 구성
2.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제정

▌현황 및 근거

○ 2004년도 전국 자치시·군·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구 41%(전국시군구 51위), 유성구 44.1%(전국시군구 39위), 대덕구 29.4%(전국시군구 109위), 중구 32.2%(전국시군구 92위), 동구 24.6%(전국시군구 126위)로 서부와 동부의 재정자립도가 2배 정도 차이를 보임.(사회양극화 실태조사-교육·의료분야 표17)

○ 동부지역 1인당 학생에게 투여되는 교육비는 3천원인데 반해 서부는 6천원으로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4>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

(단위 : 천원, %)

지역 교육 청명	해당 시,군,구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 수 (B)	학생 수 (C)	계 (D)	예산대비 보조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당 금액 (D/C)	관련조례유무
동부	동구	685,638,071	171	146,644	497,257	0.07	2,907.94	3.4	무
	중구	642,584,188	211	195,134	509,705	0.08	2,415.66	2.6	무
	대덕구	508,603,000	143	153,398	541,096	0.11	3,783.89	3.5	무
서부	서구	764,925,217	282	349,053	2,545,885	0.33	9,027.96	7.3	무
	유성구	510,817,854	183	162,348	789,317	0.15	4,313.21	4.9	유
합계		3,623,386,184	1,173	1,168,925	5,672,577	0.16	4,835.96	4.9	

·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2005년
· 각 수치는 2001년부터 2004년간의 평균임.

○ 사교육비 지출비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침. 51만원 이상의 학원비를 내는 학생이 동부지역은 5명인 반면 서부지역은 12명으로 고액일수록 그 격차가 큼.(양극화 실태조사-교육·의료 표20)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를 233개 기초지자체 중 71개로 30%이며 대전 5개 구 중 유성구가 유일하게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5년 11월에 제정하였음.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의기구인 교육복지정책위원회 구성필요

10.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확보 및 주거비 보조제도 시행

▌정책요구

1.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제공 및 낙후지역 개발 2. 저소득층에게 독립적 주거비 보조제도 대폭 확대 3. 지방정부 재정능력을 고려한 지역 간 국고 및 시비의 지원 차등화 4. 주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현황 및 근거

○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가장 먼저 지출을 확대하고 싶은 항목으로 주거비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사회양극화 실태조사 표7 참조)

○ 대전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기타거주형이 28.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거주자가 26.4%로 나타났음. 전국평균 수급권자 중 자가 거주자가 21%인데 반해, 대전은 6.1%로 상대적 주거불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사회양극화 실태조사 표8 참조)

○ 영구임대주택 주민간의 초·중·고등학교 분리 및 위화감 증대, 거주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성장환경, 낮은 진학률과 높은 중퇴율로 빈곤 악순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35%가 1일 평균10시간, 15%가 13시간 이상 근무)

○ 영구임대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이 집중 거주함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슬럼화,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서비스의 질과 지원수준이 낮아지는 위험 발생

- 저소득 밀집 영구임대아파트의 도시슬럼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주거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관리비를 체납하는 비율이 10%이고 퇴거자가 100명으로 나타났음.(사회양극화 실태조사-빈곤, 노동분야 표9)

- 주거 관리비와 월세 등을 감당하지 못 하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공간 제공.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거비 보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2005년 주거급여 : 임대가구 기준 1~2인 가구 3만3천원, 3~4인 가구 4만2천원, 5~6인 가구 5만5천원)가 유일함.

- 현 주거급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며 차상위층까지 범위를 확대한 주거비 보조가 필요함.

11.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설립

▌정책요구

○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설립 - 비정규직 상담, 생활지원, 근로조건 차별 감시 등의 활동 - 대전시 고용실태조사 및 취약계층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및 민간위탁의 점진적 축소

▌현황 및 근거

○ 대전시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대비 34.5%로 2십2만 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함. 또한 전국 평균 31.5%에 보다 3%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서울, 인천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였음.(사회양극화 실태조사-빈곤・노동 표 18)

○ 공공부문의 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 2003년 8월, 공공부문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55만 명(전체 남성 노동자의 24.8%), 여성비정규직 근로자는 97만 명(전체 여성 노동자의 53%)이며, 이외에도 파견 및 용역업체 근로자 9만 명을 더하면 공공부문에만도 총 161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기구설립이 필요함. 대전지방노동청이 노동자의 임금차별 및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기업의 중간조정역할에 머물고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적 지원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설립이 필요함.